

姜시장 “주민투표까지 검토”...의견 수렴 방식 ‘주목’

광주·전남 행정통합정책토론회

“주민투표 400억 추산...설 이전 가능”
불발시 공청회 등 거쳐 의회 의결로
전문가들 “실효성·제감 효과 제시를”
통합 기본전제는 이전보다 나은 혜택
“미래비전·특례 구제화해야” 한목소리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도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 ‘의회 의결’ 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실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방향 정책토론회’ 축사를 통해 “오늘 아침 주민투표가 어떤 절차를 거쳐 가능한지 검토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투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약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가장 빠른 로드맵을 밟으면 설 명절 전에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만약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다면 그에 준하는 간담회나 여론조사, 공청회를 거쳐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회 등’ 중심의 의견 수렴 방식도 유효한 선택지라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향 정책토론회’가 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의 발제에 이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조영권 기자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행정통합추진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주민투표 여부와 시·도민 의견을 어떤 절차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인지, 빠른 결론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놀라울 만큼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폭발한 것”이라며 “올해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행정 통합 속도전에 힘을 보탤다.

김영록 지사는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통합을 전폭 지원하고 조력하고 있는 지금이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라며 “행정통합특별법을 2월 안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 특례를 조속히 발굴해 입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행정 통합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유지하고 농업중양회 등 대형 공공기

관을 적극 끌어와야 한다”며 “광주·전남 대통합 대부흥의 새 역사를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이 공동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성공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종합토론에서는 전국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지역의 추진 현황과 핵심 쟁점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정석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특별광역연합이 출범과 동시에 폐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주도로 일을 밀어붙였을 때 좌초될 수 있다는 비싼 교훈을 얻었다. 부산으로의 빨대 효과 우려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변성수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민투표는 선거를 앞둔 시기 특성상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대신 설명회나 간담회를 자주 열어 충분히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통합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는 점이기 때문에 제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대전·충남지역이 경제과학수도라는 타이틀을 내건 것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 이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에 초점을 둔 것”이라며 “다만 지역민 수용도 면에서는 연령대별 이해도와 반응에 차이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보다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합의 기본 전제는 이전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1+1은 2 이상이 돼야 명분이 선다. 산업, 문화, 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향우회총연합회 “행정통합, 시대적 과제”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지역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대립 속에서 정체돼 왔다”며 “이제는 지역을 넘어 더 큰 시야에서 통합을 다루고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광주·전남이 먼저 지방 주도의 성장 전략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320만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가도록 1천300만 향우의 단합된 의지로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시도민회도 이날 성명을 내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광주·전남이 먼저 지방 주도의 성장전략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 북구의회는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전폭 지지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무송 의장 등 북구의원 19명은 성명을 통해 “1981년 분리 이후 40여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까지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통합, 도민 의견 수렴까지 속도내야”

김지사 “통합 골격 도의회 신속 보고” “관행 개선·갑질피해신고 직접 쟁길것”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조직의 청렴도 개선·정착, ‘가짜 일’을 없애 일하면서도 즐거운 직장 문화 만들기, 광주·전남이 균형발전 기조 속 새롭게 대부흥 기반을 이룰 행정통합의 신속 추진을 새해 역점 업무로 제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행정통합과 관련, 도의회에 대한 신속 보고·도민 의견 수렴 등 모든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새해 첫 실·국장 정책회의를 열어 “전남도 청렴도가 낮아져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과거 사무관리비 집행 관행 등 구조적 측면이 있지만 확실하게 개선하기로 한 만큼 이를 정착시키고 부패 위험이 있는 곳에 청렴감찰기동반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사후감사 뿐만 아니라 예방감사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직원들이 머리 무겁게 출근하지 않도록 ‘인격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장, 과장, 팀장 등이 솔선하고 막말과 폭언, 과도한 의전 같은 가짜 일을 없애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사항을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주변 여러 사람을 함께 조사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객관성도 확

보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김 지사는 “정부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이번이 아니면 기회 없을 것 같아 결심했다”며 “행정통합 추진기확단이 실무적인 기본 골격을 만들어 시·도의회에 보고해 보완한 뒤 범시도민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심의토록 하는 등 시·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추진하되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른 시·도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교부세 추가 배분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단 멈춰주세요.
보행자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